

# 막을수록 멀어진다. 청소년 SNS 금지의 역설

## 요약

- ▶ 호주는 16세 미만 SNS 계정 보유를 금지했으나, 실제 이용은 크게 줄지 않았고 오히려 보호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곳으로 옮겨감
- ▶ 또한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5세 미만 SNS 금지법의 핵심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, 영국은 연령 확인 의무화 이후 VPN 우회가 급증하는 등 연령 차단이 기본권 제한과 실효성 문제가 잇따라 드러남
- ▶ 연령 규제는 강제적 섯다운제처럼 특정 연령 전체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, 전 연령의 문제인 과몰입과 여가 부족·접촉 위험 등 청소년 고유의 문제를 구분하지 못해 어느 쪽도 해결하기 어려움
- ▶ 정책의 초점은 접근 차단에서 서비스 설계로 옮겨가야 하며, 설계 역시 일괄 적용이 아닌 서비스별 위험 유형에 맞춘 선별 적용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전제로 해야 함

권재한 연구위원 (jaehan@kinternet.org)

한승혜 연구위원 (shhan@kinternet.org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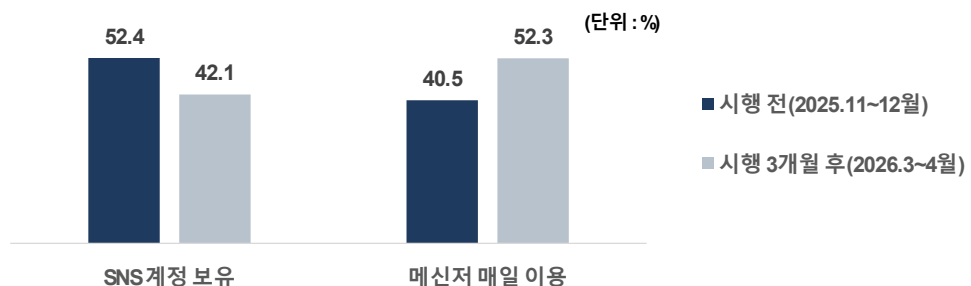
## 서론

- ▶ 청소년의 SNS 이용을 둘러싸고 국회의 법안 발의와 정부의 규제 방안 검토가 이어지고 있음(이 데일리, 2026.9.10.)
  - 가장 먼저 발의된 윤건영안(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, 제출일: 2024.7.16.)은 14세 미만의 가입 자체를 막는 접근 차단 방식을, 이후의 법안 대부분은 14세·16세·19세 미만 등 연령 기준에 따라 알고리즘 추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보호자 동의·친권자 확인 시 허용하는 방식을 택함
  - 수단은 다르나, 특정 연령 이하의 이용자를 식별해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이용 통제의 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함(한승혜, 2026)
- ▶ 그간 해외 입법은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단계였으나, 최근 호주·프랑스·영국에서 시행 결과와 사법 판단이 잇따라 나오기 시작함
- ▶ 이에 본 이슈페이퍼는 국내외 시행 사례와 통계를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과 SNS 규제라는 수단이 정합적인지 검토하고,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자 함

## 해외 규제의 경과

- ▶ 가장 먼저 금지를 시행한 호주에서는 청소년의 SNS 계정이 줄어든 데 비해 이용은 크게 줄지 않음(eSafety Commissioner, 2026)
- 호주 온라인 안전국(eSafety)의 조사에 따르면, 10~15세의 연령제한 플랫폼 이용률은 시행 전 85.9%에서 시행 3개월 후 81.5%로 4.4%p 감소에 그쳤고, 매일 SNS를 이용하는 비율(60.6% → 57.7%)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
- 계정 보유율은 52.4%에서 42.1%로 줄었으나, 계정을 잃은 청소년(전체의 13%) 중 대부분(전체의 10%)은 계정 없이 계속 이용했고, 이용을 멈춘 경우는 전체의 3%에 그침
- 오히려 이용은 보호 장치가 없는 곳으로 이동, 규제 대상이 아닌 메신저를 매일 이용하는 비율은 40.5%에서 52.3%로 늘었고, 자녀의 SNS 이용을 알지 못하는 부모의 비율은 23.3%에서 33.3%로 증가

그림 1.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시행 전후 10~15세 이용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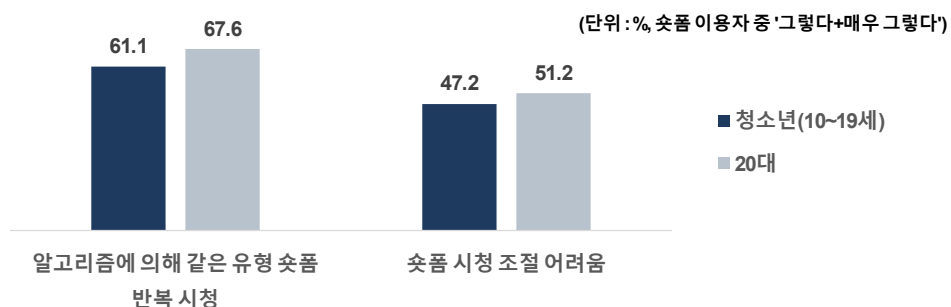
\* 출처: eSafety Commissioner(2026.8.), 10~15세 아동 803명 패널 조사 결과

- ▶ 프랑스에서는 2026년 8월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SNS 금지법의 핵심 조항(제1조)에 위헌 결정을 내림(Conseil constitutionnel, 2026)
  - 개별 청소년의 상황이나 서비스별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 금지는 표현·소통의 자유에 대한 적합하고 필수적인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함
  - 또한 이러한 금지는 그 자체로 성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연령 증명을 요구하게 되나, 입법자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보장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봄
- ▶ 영국은 연령 확인 의무화로 전체 이용자의 신원 검증 부담만 늘리고 우회는 막지 못한 상태에서, 16세 미만 SNS 금지로 차단 범위를 넓히는 중
  - 비대면 환경에서 특정 연령만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연령 인증 강화는 성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대한 신원 확인으로 확대됨
  - 영국이 2025년 7월 「온라인 안전법(Online Safety Act)」에 따라 고도화된 연령 확인 의무화 시행 직후, 주요 VPN(우회 접속 서비스) 업체의 영국 가입자가 평소 대비 1,400% 이상 급증함(UKTN, 2025)
  - 우회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 정부는 2026년 6월 16세 미만 SNS 금지 방침을 발표했으며, 같은 해 4월 제정된 「아동복지·학교법」에 근거한 하위 규정으로 2027년 봄 시행을 추진 중임(GOV.UK, 2026)

## 과몰입과 청소년 문제

- ▶ 계류 중인 법안 대부분은 연령을 기준으로 알고리즘 추천을 제한하나, 이는 오히려 알고리즘 기반 이용에서 느끼는 조절의 어려움을 청소년만의 문제로 한정하는 접근
  - ‘알고리즘 때문에 같은 유형의 숏폼을 반복 시청한다’는 응답은 20대(67.6%)가 청소년(61.1%)보다 높았고, ‘숏폼 시청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’는 응답도 20대(51.2%)가 청소년(47.2%)보다 높게 나타남(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, 2025)
  - 무한 스크롤·자동 재생 같은 설계 요소가 문제라면 이는 전 연령 이용자에게 해당하는 설계 차원의 사안이며, 연령선으로 구분해 다룰 대상이 아님

그림 2. 연령대별 '알고리즘에 의한 숏폼 반복 시청' 및 '숏폼 시청 조절 어려움' 응답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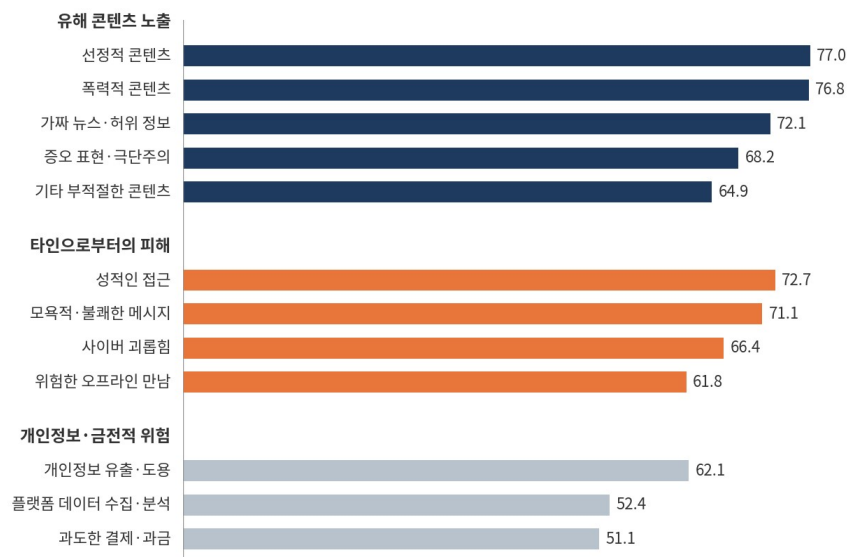
\* 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2025)

▶ 반대로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알고리즘보다는 생활 환경과 관계 구조에서 비롯됨

- 청소년의 주 여가활동 1순위는 스마트폰 이용(52.8%)이나 이를 희망 여가활동으로 꼽은 비율은 26.0%에 그쳐, 스마트폰 이용은 선택이라기보다 여가 대안이 부족한 결과에 가까움(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, 2025)
- SNS 이용 이유로는 또래와의 소통(67.3%)과 친구들의 최신 소식(43.9%)이 상위를 차지, SNS는 청소년의 또래 관계를 유지하는 기반으로 기능함(한국언론진흥재단, 2025)
- 학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온라인 활동 위험 요소로 선정적 콘텐츠(77.0%)·폭력적 콘텐츠(76.8%) 같은 유해 콘텐츠 노출과 성적인 접근(72.7%)·모욕적 메시지 수신(71.1%) 같은 타인으로부터의 피해에 집중되어 있음(진민정 외, 2025)
- 특히 그루밍·성착취 같은 접촉 위험은 추천 알고리즘이 아니라 낯선 성인과 연결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

그림 3. 학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온라인 활동 위험 요소

(단위 : %)



\* 출처: 진민정 외(2025)

## 셋다운제와 호주 SNS 금지의 비교

▶ 호주 SNS 금지와 강제적 셋다운제는 문제의 원인 대신 특정 연령 전체를 일률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설계가 같음

- 두 제도 모두 계정 보유, 차단 시스템 구축 같은 형식 지표만 움직였을 뿐 실제 이용과 과몰입이라는 목적 지표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, 집행의 성패 이전에 규제가 겨냥한 대상 자체가 문제의 원인과 어긋나 있었음
- 강제적 셋다운제는 효과가 미미했을 뿐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로의 풍선효과를 낳았음(조문석 외, 2017; 한승혜, 2026)

- 이후 연구들에서도 시행 직후 하루 인터넷 이용이 약 3.6분 줄었다가 2014년부터 효과가 사라졌고(Choi et al., 2018), 만 16세 생일 전후 집단 비교에서도 게임시간 감소가 확인되지 않음(박미경 외, 2016)
- 규제 대상인 심야시간대 게임시간은 변하지 않은 채, 비심야 PC게임이 줄고 모바일게임이 늘어 이용 매체만 이동함(손혜림, 2021)

| 표 1. 강제적 섯다운제와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의 비교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강제적 섯다운제<br>(한국, 2011.11 ~ 2021.1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세 미만 SNS 금지<br>(호주, 2025.12 ~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규제 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세 미만의 심야(0~6시) 온라인게임 접속 차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세 미만의 연령제한 플랫폼 계정 보유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우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모 명의 도용, ID 양도로 규제 회피(이진구, 201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계정 없이 접속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용 지속(eSafety Commissioner, 2026)                 |
| 이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규제 대상인 PC게임에서 모바일게임으로 이용 매체 이동(손혜림, 2021), 해외 플랫폼 등 사각지대로 전이(조문석 외, 2017) | 자녀의 SNS 이용을 모르는 부모 증가, 보호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곳으로 이동(eSafety Commissioner, 2026) |
| 이용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행 직후 하루 인터넷 이용 3.6분 감소 후 2014년부터 효과 소멸(Choi et al., 2018)                | 시행 3개월 후 연령제한 플랫폼 이용률 85.9%→81.5%, 매일 이용 60.6%→57.7%                    |
|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효과 부재와 기본권 제한 논란 끝에 2022년 1월 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사 입법인 프랑스 15세 미만 SNS 금지법 핵심 조항 위헌 결정(2026.8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▶ 강제적 섯다운제는 청소년의 우회로 실효성을 잃은 채 사업자 부담과 기본권 제한이라는 비용만 남기고 2022년 1월 폐지됨

- 부모 명의 도용, 타인 ID 양도 등으로 규제 회피가 가능했으며, 일률 적용에 따른 부모 양육권 등 기본권 제한 문제가 제기됨(이진구, 2014)
- 사업자에게는 16세 미만 이용자를 식별·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부담이 지속적으로 부과됨(이덕주, 2015)
- 반면 부모가 요청할 때 차단하는 섯다운제의 과몰입 완화 효과는 강제적 섯다운제의 약 5배로 추정, 일률 차단보다 보호자의 섯다운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함(이덕주, 2015)
- 10년간의 연령·시간 기준 차단이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줄이지 못했다는 점에서, 현재의 SNS 연령 규제 논의는 섯다운제의 전철을 되풀이할 우려가 큼

## 결론

▶ 국내외 사례로 연령을 선별해 차단하는 접근의 구조적 한계를 확인할 수 있음

- 연령 인증 강화는 전체 이용자의 신원 검증으로 이어지면서도 우회를 막지 못하고, 차단은 보호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곳으로 이동하게 됨
- 무엇보다 연령 규제는 연령을 가리지 않는 과몰입 문제와 알고리즘으로 설명되지 않는 청소년 고유의 문제를 하나로 묶어, 어느 쪽에도 맞지 않는 처방이 됨

▶ 정책의 초점은 접근 차단에서 서비스 설계로 옮겨가야 하나(한승혜, 2026), 설계 단계의 사전 위험평가 역시 적용 방식에 따라 실효성이 갈림

- 최근 국회 토론회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 등에서 제기되는 사전 위험평가는 사후 콘텐츠 규제에서

벗어나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(최진응, 2026)

- 다만 유해 콘텐츠 노출은 콘텐츠 관리, 그루밍·성착취 같은 접촉 위험은 범죄 예방, 강박적 이용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설계의 영역으로, 원인·해법·책임 주체가 모두 다름
- 이를 하나의 광범위한 체크리스트로 묶어 모든 서비스에 일괄 적용하면 해당하지 않는 항목까지 검토하는 부담이 생기고, 감독기관은 작성 여부만 확인하게 되어 형식적 준수와 실질적 개선이 분리되기 쉬움(천혜선, 2026)

▶ 플랫폼 정책은 전체 이용자를 위한 설계 기준 위에 청소년 보호를 추가, 서비스별로 실제 발생하는 위험 유형에 맞는 지표를 선별 적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

- 정부·사업자·시민사회·아동·청소년이 함께 기준을 개선해 가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병행될 때, 위험평가는 법적 이행의 영역을 넘어 실질적 안전 개선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
- 청소년 고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플랫폼 규제에 한정하지 말고, 디바이스·OS 수준의 관리 도구와 청소년 여가 대안의 확보까지 논의를 넓혀야 함

## 참고문헌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. (2025). 2025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.
- 박미경·김민길·정주호·조민호. (2016). 섯다운제의 효과성 평가. 국정관리연구, 11(3), 171-196.
- 손혜림. (2021). 섯다운제도의 시행과 청소년의 게임행태 변화에 대한 연구. 응용경제, 23(3), 5-24.
- 이덕주. (2015). 섯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. 정책연구 15-11. 한국경제연구원.
- 이데일리. (2026.9.10.). 美 청소년 SNS 하루 2시간 제한...메타, 韓 적용 "정부와 논의".
- 이진구. (2014). 인터넷게임 규제에 관한 법제개선 연구: 강제적 섯다운제를 중심으로. 현안분석 2014-07. 한국법제연구원.
- 조문석·황승흠·이덕주·최현선·김도승·박세연. (2017).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. 한국콘텐츠진흥원.
- 진민정·양소은·이은경·이하나. (2025). 불안세대와 미디어 리터러시. 한국언론진흥재단.
- 천혜선. (2026.9.28.). 토론문. 「청소년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은 누구의 책임인가?: SNS·AI챗봇 중독과 플랫폼의 안전설계 책임」 국회 토론회 자료집. 한국소비자연맹.
- 최진응. (2026.9.28.). 토론문. 「청소년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은 누구의 책임인가?: SNS·AI챗봇 중독과 플랫폼의 안전설계 책임」 국회 토론회 자료집. 한국소비자연맹.
- 한국언론진흥재단. (2025).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이용조사.
- 한승혜. (2026).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는 제2의 섯다운제가 될 것인가? 이슈페이퍼 26-4호.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.
- Choi, J., Cho, H., Lee, S., Kim, J., & Park, E.-C. (2018). Effect of the Online Game Shutdown Policy on Internet Use, Internet Addiction, and Sleeping Hours in Korean Adolescents.

Journal of Adolescent Health, 62, 548–555.

- Conseil constitutionnel. (2026.8.14.). Décision n° 2026–911 DC, Loi visant à protéger les mineurs des risques auxquels les expose l'utilisation des réseaux sociaux.
- eSafety Commissioner. (2026.8.). Early days, early insights: Understanding experiences of social media age restrictions at the three-month follow-up.
- GOV.UK. (2026.6.15.). Social media to be banned for under-16s in landmark government move to give kids their childhood back.
- UKTN. (2025.8.6.). Proton VPN reports surge in UK users after OSA.